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긴급회의

●일시 : 2020. 09. 18(금) 오후 5시

●방법 :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관련 활동경과(2020. 09. 18 현재)

일 시	방문부서	주요내용	비 고 (면담자)
2019.09.11.(수)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제 시행 관련 절차적 부당성 항의 공문 발송	
2019.09.20.(금)	보건복지부 교육부	재학생들의 학습권 박탈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제 시행 관련 절차적 부당성 항의 방문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조미영주무관 교육부 학사제도과 이승영사무관
2019.09.27.(금)	대전보건대학 교 강당	인증평가 탈락한 정평원의 인증기준 설명회 무효 의사진행 발의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와 협의도 없는 인증 진행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항의함	전국대학 관련교수 100여명 참석
2019.11.14.(목)	국회의원회관	인증 유예 동의서 접수 및 현안설명 (전국 73개 대학 중 62개 대학(84.9%) 동의, 전공교수 217명중 168명(77.4%) 동의, 학생 4,399명 동의)	남인순의원실 김봉겸보좌관
2019.11.15.(금)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증 유예 동의서 접수 및 현안설명 (전국 73개 대학 중 62개 대학(84.9%), 전공교수 217명중 168명(77.4%) 동의, 2,3년제 학생 4,399명, 4년제 학생 1,400명 전체 5.799명 동의)	교육부 학사제도과 이승영사무관 전달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신솔아사무관,조미영주무관

2019.11.16.(토)	언론기관배포	인증 절차 부당성 및 유예 동의서 접수현황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등
2019.11.21.(목)	국회의원회관	인증 절차 부당성 및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현황설명, 유예 협조요청 (전국 73개 대학 중 62개 대학(84.9%), 전공교수 217명중 168명(77.4%) 동의, 2,3년제 학생 4,480명, 4년제 학생 1,400명 전체 5.880명 동의)	이명수 전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보건복지위원장실 신종일비서관
2019.11.28.(목)	청와대 국민신문고 접수	인증 절차 부당성 및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인증 유예 3년 신청	
2019.12.07.(토)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장 면담	인증절차 부당성,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현황 설명 및 유예 협조 요청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총장
2020.01.15.(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실 탄원서 제출 (인증절차 부당성,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현황 및 유예 당위성 탄원)	교육부장관실 비서관 보건복지부장관실 비서관
2020.04.08.(수)	언론 기고	제목 :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관리사인증인가? (주요내용 : 보건의료관리사인증 절차의 부당성과 인증유예 촉구)	한국대학신문
2020.05.13.(수)	국회의원회관	당초 인증 법개정시 관련 이해단체들과의 의견 조정 미흡 및 코로나사태등으로 인증진행 곤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인증 유예 협약 필요성 설명 및 공감대 형성	남인순의원실 김봉겸보좌관 (처음 인정)

2020.06.17.(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실 탄원서 제출 (인증 유예 당위성 및 유예 동의 현황)	인증평가 담당 백승주연구 원 통화
2020.07.03.(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신솔아사무관으로부터 법개정 의견서 제출 요청받아 우리협의회 공식 의견 접수함	
2020.07.15.(수)	한국대학신문	인증유예 진행 상황 기사화	한국대학신문 홈페이지참조
2020.08.20.(목)	국회 담당보좌관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1차 협의종료, 유예 법안개정 필요성 공감.“정평원 1년, 보복부 2년, 교육부 3년, 협의회 3년으로 의견조율을 교육 부와 보복부에 지시 했다고”함. 각 대학의 신청여부 혼란으로 8월 중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부탁함	유선 통화 (코로나19로 방문 곤란)
	교육부 담당사무관	우리 협의회 의견 존중하여 3년의 유예 기 간을 통하여 각 대학들이 infra의 구축이 필요 하다고 국회와 보복부에 전했다고함. 우리 협의회 입장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한다 고 전함	
2020.08.21.(금)	보건복지부	장관실 탄원서 제출 (인증절차 부당성, 인증유예 동의서 접수 현황 및 유예 당위성 탄원)	보건복지부 장관실

2020.08.25.(화)	국회 담당보좌관	유예관련 당사자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국회 코로나 발생, 2주간 외부인 출입이 금지됨	유선통화
2020.09.04.(금)	국회 담당보좌관	현재 코로나등 일정상 간담회 개최 곤란, 협의 회도 2년 유예 동의, 의원입법으로 9.18일까지 제출 약속	유선통화
2020.09.17.(목)	정평원	부유경원장님 유예 2년 동의확인 인증신청 관련 평가 유예시 2백만원 차감에 대한 대안 강구 요청	유선통화
	보건복지부 담당주무관	국회 전문위원실 유예법안검토 확인 절차: 법안제출 ->상임위 통과 ->국회 본회통과 (11~12월 중 확정가능, 기한 12월 19일) 유예시 행정조치: 금번에 인증 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없음(회의시는 구두로 전달함)	유선통화
2020.09.18.(금)	국회 담당보좌관	현재 국회 남인순의원 2년 유예 의원입법으로 법개정안 추진 중,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중	유선통화

참고 : 한국대학신문 기고문(2020.04.08.일자)

한국대학신문

지성의 전당

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인가

▶ 발언대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
협의회 회장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2020년 말부터 적용 예정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인증제는 유예되어야 한다. 당초 본 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268호)으로 주요 골자는 '의무기록사'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명칭변경과 교육 내실화였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시행내용을 면밀히 보면 필수 및 선택학점 이수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전공 관련 교수채용, 실습실 등의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정보사 실무교육을 위한 현장실습처 확보 등 현실적으로 대학과 병원 현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법 개정 당시 전국의 보건의료행정 관련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병원행정직무 등 보건의료행정 관련 직무 4가지 교육분야의 하나인 의무기록분야 교수들과의 협의를 통한 비공개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

기 때문이다.

전국 대학의 보건의료행정 관련 학과에서는 80% 이상이 병원 원무과 등 병원행정분야로 취업하고 있으며 의무기록과 등 보건의료정보분야로의 취업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병원 현장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다는 병원행정 분야의 교육인증이 오히려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의 많은 보건의료행정관련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절차의 부담성에 공감해 교수의 약 80%, 전공관련 대학의 85%와 재학생 약 4500명이 인증의 유예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관련 기관에서도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보다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교육인증을 추진하는 것은 순기능의 대학교육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돼 두고두고 교육현장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대학들은 세계적인 코로나19 관련 사태로 강의 등 학사일정 변동에 따른 대응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최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인증을 담당하게 될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에서는 급변에만 2020년 2월 25일을 시작으로 정부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공

문을 발송해 전국의 보건행정관련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과 학과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기존 각 대학에서는 취업이 용이한 병원행정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간호과 등 타과들과 같이 학과명을 면허의 명칭과 동일하게 해 인증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취업을 향상을 위해 먼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에 필수인력의 인원을 확대하거나 필수인력으로 포함되도록 의료법을 먼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각 대학에서는 교수채용과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마스터 플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넷째, 중·소도시의 대학들도 총무과나 원무과가 아닌 의무기록분야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인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보건의료행정분야를 전공하는 약 4500명의 청년들이 유예를 요청하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진로를 생각한다면 현재 인증을 추진 중인 법률의 유예를 통해 전국의 관련대학, 학생,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금부터라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적극협조 해 주신 회원 및 비회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한 시간되십시오^^